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제대군인 예우에 최선 - 「2024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과 「이지 행정심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 -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 제대군인 주건을 맞아 제대군인의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표하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논의
 - 한 총리, “제대군인이 군 복무 기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 제2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것”
 - 군 경력 인정 확대, 제대군인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 제복군무자 감사 캠페인 등 예우문화 조성 등
- ▷ 전년 대비 더 커진 규모와 높은 할인율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부진 극복의 전환점이 될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마련
 - 한 총리, “국가대표 할인행사로 자리 잡은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부진을 타개할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기할 것”
 - 유통·자동차·가전 굵직한 할인, 서비스·식음료 업체 다채롭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팔도특산물, 지자체e-몰 특별할인 등 준비
- ▷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지 행정심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 한 총리, “국민 권익규제를 위한 행정심판 활용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
 - 표준 모범례 입력 확대 추진, 기관별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인공지능(AI) 기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이지 행정심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정부는 10월 둘째 주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여 제대군인 정책 환경 및 현재까지의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제대군인 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제대군인 취·창업 현장을 방문, 국가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강조한 바 있다.
- 그간 제대군인 정책은 1998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이래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정책이 꾸준히 확대·발전되어 왔으며, 2006년 동 법 개정으로 5년 이상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등 지원이 시작되었다.
 - 2012년부터는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10월에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3년부터는 군인을 비롯한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감사 문화 확산을 위한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 2024.10.7.~11 : 주간 선포, 제대군인 힐링 프로그램,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등
 - 금년 1월 개정·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조항 신설,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 등에게는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군 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가운데, 최근 현역병 처우 개선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초급간부 처우로 지원을 또한 감소하고 있다.
 - * 초급간부(ROTC) 지원을 감소 : ('21년) 2.6:1 → ('22년) 2.4:1 → ('23년) 1.6:1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초급간부 포함 약 25만여 명의 의무복무자와 국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이날 회의에서 ①군 복무가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경력 인정, ②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③국민과 함께 제대군인 예우·문화 조성, ④미래 보훈인구 변화를 감안한 제대군인 정책 비전 수립 등에 관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관계부처간 단계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안건 2.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

- 정부는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 앞으로 한 달(D-30) 남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최대규모’로 추진하여 수출 호조세가 내수 확산으로 이어지게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행사기간) '24.11.9(토)~11.30(토) 22일간
 - (행사주체) 코세페 민간 추진위원회(체인스토어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10개 단체)
 - (슬로건)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 (홍보대사) 국가대표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
- 9회째를 맞이한 코리아세일페스타는 '15년 메르스, '19년 코로나 등의 어려운 시기에 내수진작을 위한 쇼핑 행사로 추진되었으며 올해는 소비심리를 북돋아 민생경제 활력제고의 전환점이 되도록 관련 업계·정부·지자체가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다.
 - * 2015년은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명칭으로 추진
-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생필품 할인(식품·패션·생활용품 등), △자동차·가전·타이어 등 내구재 할인 △관광·문화·외식 등의 할인상품이 준비 중이다.

- 올해는 특히 리조트·테마파크 등의 신규참여 확대가 특징이며 편의점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출시, 식음료 온라인 타임딜 등도 처음으로 추진된다.

* 참여기업 할인품목, 할인율 등 참여계획은 11월 초 행사 직전 공개

-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기·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우체국 쇼핑의 지역특산물 판촉전(팔도마켓), △지자체의 e-몰 특판전, △중기제품 온라인 특별전(상생마켓, 小中한 마켓) 등이 준비 중이며 방한 관광객 대상 쇼핑축제인 코듀페(면세점 업계, 11.9~30)도 코세페와 같은 기간 진행된다.

- 향후, 정부는 기업들이 다채롭게 준비한 할인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수출 12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수지 16개월 연속 흑자가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일정 : 코세페 민간 추진위원회 추진계획 발표 (10월 21일)
코세페 개막식 (11월 8일(금), 명동)

< 안건 3. '이지 행정심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작년 2월부터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술을 활용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서비스 주요내용

- 부당한 처분을 당해도 법률지식이 없는 국민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에 접속하면 청구취지 등 유사 사례를 제공받아 법률가의 도움 없이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완성·청구 기능을 제공하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2023년 개통과 함께 첫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오픈 기념 설문 조사에서 만족도는 82.6점, 그 해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87.3점으로 나타났다.
- 현재까지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533건이 청구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만 13,068명의 국민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104,095회 서비스를 조회하는 등 시스템을 사용해 본 이용자들 대다수가 좋은 호응을 보였다.
-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활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

-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권익위는 단기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실제 국민 이용률이 높은 개별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 이와 동시에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을 신속히 추진한다.
 - 2026년 이후에는 ‘이지행정심판’ 시스템을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과 접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지원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신속히 통합하고, 국민이 직접적으로 이용 편의성 등을 체감할 수 있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정책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이희갑 (044-200-2056)
		담당자	서기관	이영승 (044-200-2535)
담당 부서 <제대군안>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조민호 (044-200-2123)
		담당자	사무관	허창기 (044-200-2125)
<공동>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운철 (044-202-5710)
		담당자	사무관	김시은 (044-202-5173)
담당 부서 <코세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2211)
		담당자	사무관	김동빈 (044-200-2212)
			사무관	김은영 (044-200-2884)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4380)
		담당자	사무관	서민경 (044-203-4385)
담당 부서 <이지행정심판>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세필 (044-200-2089)
		담당자	서기관	김민경 (044-200-2090)
<공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책임자	과 장	손인순 (044-200-7811)
		담당자	서기관	김종현 (044-200-782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